

이재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사회적 대타협 필요”

반도체법 이달 처리 어려울 듯
“노동유연성 확대 안정적 고용”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장 재확인
“추경 30조 중 10조 ‘민생회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규모로는 30조원을 제시했다.

2월 국회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정협의회 3대 현안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노동시간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당의 요구대로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는 이달 중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며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대표 연설 이후 추가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 총량은 유지하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는 것을 기업 측의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조차 52시간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상호 간의 불신을 복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

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튼 우자”고 제안했다.

정책위는 “모수개혁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방안이 이미 있고, 민주당은 이미 여당의 소득대체율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합의 가능한 모수개혁 안부터 처리하고, 구조개혁 등 쟁점사안들은 순차적으로 합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400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이르면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이 4차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회담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실무협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짚다며 예정대로 4차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가 임시적 비대위원장이고 당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아직 실무 협의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원이, ‘대기업 갑질’ 방지법안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사진)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상대체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나광국 도의원 “여객기 참사 수습인력 24% 트라우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인력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심리치료와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무안2·사진) 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휴가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여객기 사고는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사”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사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서현 도의원 “이민청 설립 지연... 전남도 대책 마련을”

전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가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정부 및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해당 부서 내 이민국을 신설할 것을 밝혔으나 이후 관련 논의



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정부 차원의 이민청 설립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이민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지방시대위, 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업무협약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0일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 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 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 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의 조성 및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5당 ‘내란종식 연대회의’ 내일 출범 전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연대회의’가 12일 출범할 전망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5개 야당 대표가 모

여 이번 주 연대회의 출범을 정식으로 알리고 대표들이 각자 기대하는 바를 직접 말씀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5당은 첫 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저녁 실무회의를 더 이어간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12일 야5당 대

표가 모여왔고 선언문이나 합의문 등 어떤 형태의 문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야당이 뿔뿔이 (흩어져) 싸우는 게 아니라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시민사회 목소리까지 합쳐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연합 같은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